

# 의원 정수부터 자치권까지… 시·도의회 입장차 ‘뚜렷’

시의회 “광주 43명으로 정수 늘려 대표성 확보해야”  
도의회, 현행 선거제·자치권 유지…·Honors 최소화 중점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 발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가 특별법의 광역의회 분야에서 뚜렷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시의회는 통합특별시의회를 기준 광역의회와 구별되는 강력한 자율·독립 기관으로 설계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도의회는 현행 지방자치·선거제도 틀을 유지한 채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26일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가 구상한 특별법안을 살펴보면 양측은 의원 정수와 선거구, 의회의 권한, 예산·인사의 독립성 등 핵심 쟁점 전반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다.

우선 의원 정수와 선거구 특례에서 입장 차이가 명확하다.

시의회는 첫 통합선거에서 의원 정수 확대를 명시했다. 현재 광주시의원은 23명, 전남도의원은 61명으로 구성됐는데, 이를 광주 43명, 전남 55명 등 총 98명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비례대표 비율도 지역구의원 정수의 20%로 확대하는 특례

를 법률에 담았다.

광주·전남 간 정치적 대표성 불균형을 막기 위한 별도의 특별시의회 선거구획정 위원회 설치도 규정했다.

하지만 도의회는 정수·선거구 특례 대부분을 반영하지 않고 현행 선거 제도 유지 기조를 보이고 있다.

양 의회는 권한과 위상에 대한 부분에서도 은동 차이가 드러난다.

시의회는 통합의회를 대의기관, 입법 기관, 최고의사결정 기관 등으로 규정, 법적 지위를 명문화할 것을 요구했다. 시·군·구 조례의 상위 규범으로도 명확히 하려했다.

이에 비해 도의회는 시·군·구 자치권을 고려해 조례 관계를 포함적으로 규정하고, 세부 사항은 기존 지방자치법 체계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시의회는 특별시의회 소관 세출예산 편성권 신설, 사무기구 조직 및 정원 조례 위임 등 조직권과 인사권의 독립성 등 자치권을 강화했다.



26일 영광문화예술의전당에서 열린 광주·전남 행정통합 도민공청회에서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이개호 국회의원, 김대중 전남교육감이 주민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전남도

도의회는 기본 구조에는 동의하면서도, 정을 넣어 광역화에 따른 혼선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 같은 차이는 행정통합으로 탄생할 특

별시의회에 대한 기본 인식 차이에서 비롯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광주시의회는 특별시에 맞춰 의회의 역

량도 강화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반면, 전

남도의회는 행정통합으로 급변할 조직, 권

한을 단계적으로 설계한 것에 중점을 뒀다

는 의견이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각 의회의 입장 차

이가 확인한 만큼 향후 특별법 심의 과정

생정으로 부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의회는 이날 전남도의회에

통합시의 명칭과 주청사, 의원 정수 등을

논의할 TF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이상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 행정통합 선거제도 개선 미흡 여야, 선관위 대응 등 질타

여야는 26일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광역행정통합과 관련한 선거 제도 개선에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다며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현재 추진되는 광주·전남과 대전·충남 등 행정통합으로 광역자치단체 간 의사수불균형 문제 등이 발생할 우려가 제기되는 데도 선관위가 특별한 대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은 이날 허철호 선관위 사무총장에게 “통합특별시가 출범할 때 통합특별시의회의 선출에 관한 고민을 선관위가 하지 않았다는 건 심각한 문제”라며 “선관위는 특별법에 담는 방식으로, 기존의 선거구를 승계하는 방식으로 선거를 치르자고 말하는데 이건 대단히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지금 출마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지방선거가 4개월밖에 안 남은 시점에서 (광역통합으로) 선거가 있을지도 없을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며 “선관위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데 자료를 요구해도 내용이 없는 것을 보면 크게 고민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 정춘은 의원도 “선관위는 국회 입법만 기다릴 게 아니라 올바른 선거제도가 어떤 것인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제도 개선 요구 의지를 보여야 한다”며 “잘못된 것은 적극적으로 고치는 것이 공정이다. 그런 자세로 대응을 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야당은 선관위의 선거 관리 부실 논란과 외국인의 지방선거 투표권 부여 문제도 지적했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21대 대선 사전투표 첫날 유권자는 투표장을 들고 밖으로 나와 식사까지 하고 왔다”며 “당시 치명적인 실수를 한 선거사무원에 대해서 아무런 징계 조치도 안 했다는 것 자체가 선관위의 안이한 태도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같은 당 김은혜 의원은 외국인이 영주권 취득 후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투표권을 받는다는 점을 지적하며 “실제 거주하지 않는 사람이 투표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지방자치·주민자치의 근간을 흔들고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상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 민주당, 고 이해찬 전 총리 합동 분향소 운영

### 오늘부터 광주 5·18 민주광장·전남도당 대회의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과 전남도당은 고 이해찬 전 국무총리를 추모하기 위해 광주와 전남지역에 합동 분향소를 설치·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합동 분향소는 광주 동구 5·18 민주광장과 전남도당 대회의실에 각각 마련되며, 27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운영된다.

광주시당과 전남도당은 이번 합동 분향소 운영을 통해 고인이 걸어온 정치적 여정과 민주주의 발전을 향한 현신

새기고, 그 정신을 지역과 국가의 미래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원이 전남도당 위원장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거울, 고 이해찬 상임고문을 뜻을 나누는 계기로 삼는다는 방침이다. 시·도당은 분향소는 운영 기간 동안 시민들의 자율적인 추모가 이뤄질 수 있도록 안내와 질서 유지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양부남 광주시당 위원장은 “이해찬 전 국무총리는 민주화 이후 대한민국 정치의 주요 국면마다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해 온 인물”이라며 “광주시당은 고인의 뜻과 정치적 유산을 염두에

놓고 5·18 민주광장과 사회장을 겸하는 형식으로 장례 절차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수석부의장의 시신은 27일 오전 인천공항에 도착해 빈소인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으로 운구될 예정이다.

참여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낸 이 수석부의장은 베트남 출장 중이던 지난 23일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현지 병원에 서 치료받았지만,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전날 오후 별세했다.

이상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 이해찬 전 총리 장례, 기관·사회장 엄수

#### 31일까지 닷새간… 민주당·민주평통 공동 주관

베트남에서 출장 중 갑작스럽게 태계 한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의 장례가 27~31일 기관·사회장으로 치러진다고 민주평통이 밝혔다.

장례는 민주평통과 더불어민주당이

공동으로 주관한다. 사회장은 국가와 사회에 공적을 남긴 저명인사가 사망했을 때 사회 각계 대표가 자발적으로 장례의 위인을 구성해 치르는 장례의식이다. 민주평통은 유족, 정부·정당과 협의를 거쳐 고인에 대한 충분한 예우를 위

해 기관장과 사회장을 겸하는 형식으로 장례 절차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수석부의장의 시신은 27일 오전 인천공항에 도착해 빈소인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으로 운구될 예정이다.

참여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낸 이 수석부의장은 베트남 출장 중이던 지난 23일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현지 병원에 서 치료받았지만,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전날 오후 별세했다.

이상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 통합특별시 공무원 근무지·인사 원칙 모색

### 행정체재개편지원단 구성… 근무지 이동·인사 방안 등 준비

광주시와 전남도 행정통합 후 공무원 근무지 이동과 신규 채용 등의 인사 방안을 마련하는 기구가 정부차원에서 구성돼 본격 논의된다.

광주시는 행정안전부가 최근 행정체재개편 지원단(행안부지원단)을 설치하고 현재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광주와 전남·대전·충남지역 등의 공무원 파견을 요청했다고 26일 밝혔다.

광주시는 3급 1명과 5급 3명·6급 3명 등의 직원을 행안부지원단에 보내기로 결정했다. 파견 직원은 조직·인사·재정·자치법규 등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행안부 행정체재개편 지원단은 차구 공무원까지 구성이 완료되면 공무원

을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통합 후 근무지 이동과 신규 공무원 채용 방식 등을 논의한다.

가칭 ‘광주·전남특별시 특별법’에는 현재의 공무원은 종전 근무지에서 자속 근무하고 4급 이상 간부급에 대해 특별시장의 재량에 따라 타지역 근무가 가능하도록 하는 암이 논의되고 있다.

또 행안부지원단은 통합 후 신규 공무원 채용 방식도 논의한다.

광주시는 5개 차자구 포함, 지난해 205명을 신규채용해 배정했다. 반면 전남은 각 시·군별로 채용이 이뤄지고 있지만 일부 차자체의 경우 지원자가 없어 2차·차

졌다. 행안부지원단은 통합 후 신규 채용 방식 등을 결정하고 특별법에 담을 것인지, 특별시장의 재량으로 할지 등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시·도의 다른 승진 규정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공무원 승진은 광주시는 늦고 전남은 빨라 같은 입사년도 동기의 경우 근속연수가 쌍일수록 2개월 정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통합특별시 특별법에는 인사 이동 제한 등의 원칙만 있고 세부적인 안은 담기지 않을 것으로 보여 행

안부가 지원단을 통해 특별시의 인사규정을 개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의 인사 불이익이 없도록 의견을 충분하게 전달하고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양동민 기자 yang00@

전남 곡성군과 신안군 등 전국 10개 군 영·경남 남해 등 10개 군이다

에 내달 말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이 이와 함께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사업도 본격 진행을 앞두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임기근 기획처 장관 직무 대행 차관 주재로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서면 개최하고 5건의 사업 계획 적정성 검토 결과를 심의·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인구소멸위기 지역 농어촌 주민에게 2026~2027년 월 15만원씩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사업은 사업으로 시작된다. 해외 현지 팝업스토어 등 마케팅, 역주구 서비스 확대를 위한 콘텐츠 현지화, 물류비 등을 지원해 K-SO비 제의 판로를 다변화하고 글로벌 유통 플랫폼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2676억원 규모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은 경기 연천·강원 정선·충북 옥천·충남 청양·전북 순창·장수·전남 곡성·신안·경북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 농식품부 “농어촌 기본소득 사용지역 확대”

### ▶ 1면 ‘급물살 행정통합’ 서 계속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달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을 앞두고 지역별로 생활권을 구성해 사용 지역을 넓히고, 병원·약국 등 5개 업종에 대해서는 사용지역 제한을 두지 않고 군

내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소멸 위기 지역 농어촌 주민에게 다음 달부터 내년까지 월 15만원씩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조 2664억~1조 2676억원 규모다.

농식품부는 이번 주 중 지방 정부별 신청자 자격 확인 등을 거쳐 다음 달 말부터 농어촌 기본소득을 본격 지급할 계획이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소재지나 명칭에 대해서는 지역 국회의원들과 협의해 조율해가겠다”고 전했다.

주 청사 문제 등을 놓고 지역 사회 이견이 드리나면서, 특별법 발의 전 마지막 논의 테이블이 될 것으로 보이는 4차 간담회에서 합의에 이를지 관심이 쏠린다.

강 시장과 김 시장을 비롯해 지역 국회 의원들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조찬간담회 열고 주청사·명칭 등을 포함 특별법을 최종 논의한 뒤 다음날인 28일 특별법을 발의할 방침이다.